

보험업법 시행령

<목 차>

- 1.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 2.손해사정업무 평가시 자회사와 비자회사간 차별 금지
- 3.손해사정사 보수교육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서승리
	담당부서 (과)	보험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안창국		연락처	02-2100-2993
	과장	신상훈		이 메 일	2081072@mail.g o.kr

2024. 03. 27.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2.규제조문	보험업법 시행령 안 제96조의5제2항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85조제4항제2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4.01~2024.05.1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div><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div> <div><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은 ❶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❷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div> <div><input type="checkbox"/>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div> <div>*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div> <div><input type="checkbox"/> '24.1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div>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선정 기준과 선정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비율을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 이상으로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사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보험회사</td><td>38개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38개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38개사								
9.규제목표	보험회사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편익 : 손해사정업무 위탁의 공정성 제고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								

	<div>분석 (정성분석)</div>	<div>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분쟁 감소 및 이에 따른 보험산업 신뢰성 향상</div> <div>비용 : 손해사정업무 자회사 위탁비율이 50%를 넘는 보험회사의 공시의무 이행으로 인한 행정적 불편</div> <div>단순 행정불편으로 인한 비용보다 소비자 및 보험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향상이라는 편익이 더욱 큼</div>			
기타	12.규제 일몰제	<div>대분류</div>	<div>소분류</div>		
		<div>일몰설정 예외기준</div>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div>경제규제 여부기준</div>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div>일몰설정 세부기준</div>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div>일몰설정여부</div>		<div>일몰조문</div>	<div>연장여부</div>
		<div>미설정</div>			
		<div>일몰유형</div>		<div>일몰설정기간</div>	<div>일몰주기</div>
	13. 우선 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제96조의5(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의 위탁) ②법 제185조제4항제2호 에서 말하는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 정 위탁 건수의 100분의 50을 말한 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 손해사정은 ❶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❷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 ☐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 *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 '24.1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각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보고·공시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자회사 위탁 방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보험회사	입법예고(4.1~5.13일)		

3. 규제목표

- 손해사정위탁의 공정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손해사정업무 위탁의 공정성 제고 및 과도한 자회사 위탁을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무인 공시의무 부과

→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확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규범적 조항으로서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사례 존재

예) 은행법 제30조의2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위해 비교공시 의무 부과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이미 자율규제 사항으로 시행중인 내용이므로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보험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5월 손해사정 제도개선방안 발표

○ '24.2월 보험업법 개정

2. 향후 평가계획

☐ 손해사정 업무 자회사 위탁비율 점검

3. 종합결론

☐ 그간 제기되었던 과도한 손해사정업무 자회사 위탁비율을 개선하고,
손해사정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타당한 규제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자회사 위탁 손해사정 비율이 50%가 넘는 보험사
활동제목	공시의무 등 이행
비용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대비 자회사 위탁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시 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필요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
활동제목	공시의무 등 이행
편익항목	공정한 손해사정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그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자회사 위탁 비중이 높아 (75%) 공정성 등에 대한 비판이 큰 상황이었음. 이에 따라 업권 자율규제 등을 통해 자회사 위탁비율 공시를 진행하였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화 완료</p> <p>이를 통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에 제고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p>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손해사정업무 평가시 자회사와 비자회사간 차별 금지								
	2.규제조문	보험업법 시행령 안 제96조의6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85조제5항제8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4.01~2024.05.1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div><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div> <div><div>○ 손해사정은 ❶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❷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div></div> <div><input type="checkbox"/>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div> <div><div>*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div></div> <div><div>○ '24.1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div></div>								
	7.규제내용	<div><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금지되는 사항중, 위탁계약을 맺은 자회사와 비자회사를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div>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보험회사</td><td>38개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38개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38개사								
9.규제목표	보험회사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보험회사 손해사정 업무 위탁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지								

	분석 (정성분석)	<p>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 따른 규제 준수비용이 발생하나, 자회사/비자회사 차별금지로 인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에 제고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라는 편익이 크게 발생</p>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이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96조의6(손해사정 업무 위탁시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 법 제185조제5항제8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p> <p>1.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자를 평가할 때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p> <p>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공정한 행위</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 손해사정은 ❶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❷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 ☐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 *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 '24.1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손해사정 위탁시 자회사와 비자회사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자회사, 비자회사간 차별없이 공정한 기준에 의해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도록 하였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등	입법예고(4.1~5.13일)		

3. 규제목표

- ☐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손해사정위탁의 공정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위로 자회사와 비자회사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고하고, 손해사정의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함
→ 목적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확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규범적 조항으로서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부당한 차별은 불공정행위로서 대다수 법률에서 금지

예) 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시,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공정거래법 제45조 사업자는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음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금지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자회사와 비자회사간 차별 금지와 함께 객관적인 위탁기준 신규 설정 의무 부과, 그간의 업계 자율노력 등으로 준수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보험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행정적 집행 가능성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예산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5월 손해사정 제도개선방안 발표

○ '24.2월 보험업법 개정

2. 향후 평가계획

☐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이행여부 평가

3. 종합결론

☐ 손해사정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타당한 규제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보험회사
활동제 목	자회사/비자회사 차별금지
비용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보험회사 손해사정 업무 위탁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 따른 규제 준수비용 발생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
활동제 목	자회사/비자회사 차별금지
편익항목	공정한 손해사정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자회사/비자회사 차별금지로 인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에 제고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손해사정사 보수교육											
	2.규제조문	보험업법 시행령 안 제96조의7제1항, 제2항 및 별표4제4호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86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4.01~2024.05.1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div><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div> <div><div>○ 손해사정은 ❶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❷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div></div> <div><input type="checkbox"/>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div> <div><div>*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div></div> <div><div>○ '24.1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div></div>											
	7.규제내용	<div><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 및 법인 손해사정사는 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2년 주기로 보수교육 의무 부과</div> <div><input type="checkbox"/> 20시간 이상(보조인은 15시간, 2개 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들어야 하며</div> <div><div>○ 이 경우, 외부 교육시간은 5시간 이상</div></div>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사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보험회사</td><td>38개사</td></tr><tr><td>피규제자</td><td>손해사정업자, 손해사정사</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38개사	피규제자	손해사정업자, 손해사정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38개사											
피규제자	손해사정업자, 손해사정사												
9.규제목표	손해사정 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품질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동 조항 신설로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손해사정사에게 교육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었으나, 이를 통해 손해사정 업무의 전문성 및 품질이 제고되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제고 된다는 점을 감안시 비용 대비 편익이 큼		
기타	12.규제 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 정예외 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 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 정세부 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96조의7(손해사정사 보수교육) ①</p> <p><u>법 제18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 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손해사정사, 보조인에게 최초로 등록 또는 신고(등록 또는 신고가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2년이 지날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이하 “교육기간”)에 별표 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u></p> <p>② <u>법 제18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손해사정업자(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최초로 등록 또는 신고(등록 또는 신고가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2년이 지날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이하 “교육기간”)에 별표 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u></p> <hr/> <p style="color: blue;">4. 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구 분</td><td>교육기준</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 . 교육 과목</td><td> 1.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3.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4. 이 외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 .</td><td>보험회사, 손해사정업자, 법 제178조제3</td></tr> </table>	구 분	교육기준	가 . 교육 과목	1.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3.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4. 이 외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나 .	보험회사, 손해사정업자, 법 제178조제3
구 분	교육기준						
가 . 교육 과목	1.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3.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4. 이 외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나 .	보험회사, 손해사정업자, 법 제178조제3						

현행	개정안						
	<table> <tr> <td>교육기관</td><td>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td></tr> <tr> <td>다. 교육방법</td><td>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td></tr> <tr> <td>라. 교육시간</td><td>20시간(보조인은 15시간, 2개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 경우 금융위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td></tr> </table>	교육기관	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라. 교육시간	20시간(보조인은 15시간, 2개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 경우 금융위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교육기관	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라. 교육시간	20시간(보조인은 15시간, 2개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 경우 금융위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 손해사정은 ❶보험회사의 고용·위탁(자회사/非자회사) 손해사정과 ❷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으로 구분
- ☐ '21.5월,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 * 주요내용 : ①손해사정 위탁 공정성 제고, ②독립손해사정 활성화, ③손해사정 품질제고(손해사정 원칙·절차 정비, 교육 의무화) 등
 - '24.1월, 동 개선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 '24.8.7일)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손해사정사는 자격증을 등록, 신고한 이후 특별한 보수교육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았음
- 새롭게 변하는 손해사정 시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교육의 필요성 증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보험회사, 손해사정업자, 손해사정사	입법예고(4.1~5.13일)		

3. 규제목표

- ☐ 손해사정업무의 전문성 및 품질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손해사정업무의 전문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기준을 참고하여 교육의무 및 기준을 규정하였음

→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확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규범적 조항으로서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4의 1호 :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의무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②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하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④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보험협회는 매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불완전 판매 건수 등 보험협회가 교육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⑥ 보험협회, 보험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구분	교육기준
가. 교육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과목	3)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4)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보험중개사 및 별표 3 제1호라목의 보험설계사만 해당한다) 5)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나. 교육기관	보험회사, 제59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라. 교육시간	20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보험설계사 등과 비슷한 교육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수용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사항으로서 행정적 집행 가능성은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상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5월 손해사정 제도개선방안 발표

○ '24.2월 보험업법 개정

2. 향후 평가계획

☐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이행여부 평가

3. 종합결론

☐ 손해사정업무의 전문성, 품질 제고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필요 타당한 규제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875		87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875		875
기업순비용		875	연간균등순비용	105.81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교육의무를 이행하는 보험회사, 법인 및 개인 손해사정업자
활동제목	보수교육
비용항목	교육훈련
비용	875,000,00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교육대상자수(손해사정사 1만명, 보조인 1만명) x 연간 교육 횟수(손해사정사 20시간, 보조인 15시간) x 수강료(시간당 5천원) x 1/2(교육주기 2년) $[(10000 \times 20 \times 5000) + (10000 \times 15 \times 5000)] \times 1/2$
근거설명	교육대상자 수 : 현재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은 각각 1만명으로 추정 연간 교육 시간 : 손해사정사 20시간, 보조인 15시간 수강료 : 강의료, 개발비, 튜터비 등을 고려한 추정 비용이나 강의 내용 및 수강 인원, 교육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시 변경 가능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
활동제목	손해사정사 보수교육
편익항목	손해사정사 품질 제고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현재 손해사정사는 자격증 취득 후 의무 보수교육이 없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 앞으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경우, 손해사정의 품질이 제고되고, 소비자 편익 증대 예정